

재도약하는 중남미 경제

徐 東 赫*

90년대 들어 뚜렷한 경제회복세 반전

외채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80년대의 지루했던 침체기를 경험한 중남미경제는 90년대 들어 다시금 재도약을 향한 새로운 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해 국제적인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돌이켜 볼 때 중남미는 지난 80년대부터 90년까지의 기간중 평균 연 1.3%의 극히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91년 들어 85년이래 가장 높은 3.5%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경제는 상승국면으로 반전하기 시작하였다. 1인당 GDP가 거의 10년 간의 계속적인 감소후 9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한 것과, 경제의 뚜렷한 안정세에 비례하여 중남미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도 낮아지고 있는 사실은 중남미의 경제회복세를 겸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영국의 EIU 리스크평가에 의하면 90년 3분기에 62이던 리스크 지수는 금년 1분기에 58.8로 낮아졌다. 아시아가 같은 기간중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 모든 개도국 지역의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진 것과

비교할 때 분명 중남미경제는 80년대의 암울했던 시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성장의 주역은 단연 칠레와 아르헨티나이다. 칠레는 91년과 92년 각각 6%와 10%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아르헨티나도 7.3%, 9%를 기록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네수엘라와 파나마가 2년 연속 6~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폐루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완만하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남미의 경제회복은 경기변동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증권시장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980년부터 92년 까지 멕시코가 10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약 5배, 칠레가 3.5배, 콜롬비아가 6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남미 증권시장의 신장은 최근의 약 2년 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활황국면은 각국의 경제안정화를 기조로 한 구조조정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남미 최대의 증권시장인 멕시코의 경우, 1991년 말 1,400이던 주가지수는 NAFTA체결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의 급증에 힘입어 작년말에 1,800으로 29% 상승하였다. 그러나 NAFTA발효의 전제로서 환경, 노동문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대 경제학 석사, 개도국 경제 전공

제 등 몇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돌출되면서 금년들어 주가는 약간 하락세 내지 횡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NAFTA 추가'로 불리울 정도로 미국의 NAFTA에 대한 입장에 민감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경제정책 변화와 성장요인

이처럼 중남미경제를 안정적 성장세로 돌아서게 한 가장 큰 요인은 혁신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에 있다. 중남미 각국은 더이상의 국내산업보호와 간섭주의(interventionism)를 포기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경제체제면에서의 완전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중남미 각국은 이를 통해 자국경제를 그동안 격리되다시피 하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재편입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국 모두가 강력히 추진중인 경제안정화정책의 골자는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 건전재정 추구,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정책의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관성을 지닌 재정·금융정책, 물가안정책, 대규모의 민영화, 환율정책의 신속적 운용, 정부역할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 등에서의 각론적 조치는 침체되었던 경제에 일대 활력소를 불어넣으면서 경제를 건전화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및 다국적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90년 이후 경제자유화정책이 중남미 경제정책의 주류를

이루면서 최근 중남미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산업은 수십년동안 지속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야말로 무(無)경쟁상태에서 안주해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중남미는 이러한 급격한 경제개혁으로 치루어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깊게 패인 경제의 주름살을 제거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강세이던 농업은 이제 더이상 비교우위를 누릴 수 없게 됐으며 제조업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더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시장의 틈새(niches)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무, 섬유에서 철강,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아온 산업들은 방만한 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힘든 작업에 착수해야 할 입장이다.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호전시킨데는 과거와 달리 짧은 세대로 이루어진 정책책임자들의 능력과 개혁노력이 기여한 바 크다. 바야흐로 정책입안자들은 미봉책의 반복에 불과해선 물가안정 조치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며 대표적인 정책입안자가 까바요(D. Cavallo) 경제장관이다.

최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요인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물가안정의 달성, 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외채부담의 감

소로 압축될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전체의 물가상승률은 국가별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89년을 정점으로 완전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가·임금 연동조치의 해제 및 임금·생산성의 연계와 같은 과감한 안정정책, 환율의 고정, 무분별한 통화발행의 금지, 수입시장의 개방 등이 효과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대국 브라질은 아직도 초(超)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작년에 1,16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5월말 현재 전년동기비 1,500%에 달하여 심각성을 더해가는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뚜렷한 나라는 아르헨티나로서 89년 4,924%이던 물가상승률은 91년 84%로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는 17.5%로 더욱 낮아졌으며 금년 5월말 현재에도 전년동기비 12.3% 상승하는 데 그쳐, 가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웃 브라질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밖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91년 18-27%에서 작년에 11-2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금년에 와서는 더욱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중남미 경제를 얼룩지게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은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35% 이내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전반적으로 중남미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자측면에서 볼 때, 90년 160억 달러이던 총자본 유입은, 91년 340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480억 달러로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 자본이 대부분 민간부문으로 유입되는데다 비외채 성격을 지니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특히 경제활성화에의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90년 80억 달러에서 91년 14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160억 달러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단연 멕시코이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도 주요 투자대상국이다.

간접투자 실적도 89년 14억 달러에서 작년에 153억 달러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개도국에 대한 간접투자중 중남미에 대한 투자 비중이 89년 18%에서 작년에 56%로 크게 높아질 정도로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투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금리 차이를 노린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과 최근 중남미 경제 회복에 편승하는 투자성 자본의 유입이 혼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외채문제에 있어서도 중남미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 외채 지불 거부 아래로 갈등을 빚어왔던 채권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국제금융계로 복귀함으로써 경제를 누르는 큰 짐을 덜게 되었다. 즉, 「브래디 플랜」에 따른 외채탕감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채무국의 채무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진행 또는 합의로 각국의 외채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며 나아가 신규차관의 공여문제도

많은 나라에서 합의를 보았다. 실제로 외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인 수출액에 대한 외채총액의 비율은 84년부터 89년까지 평균 359%였으나 92년에는 282%로 크게 낮아졌으며, 86년에 37%였던 수출에 대한 외채이자 지불 비율도 91년 23%로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다시 20%로 하락하였다.

중남미 경제의 이슈들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현상들은 경제통합과 민영화, 수입자유화 등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의 향후 경제성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경제통합의 추진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상태이다. 지역경제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인 가운데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중남미 전역에서도 역내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현재 경제통합은 안데안 공동시장(ANCOM),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G3 자유무역지역 등 소경제권별로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또한 금년 2월에는 G3 3 개국과 CACM 5 개국, 파나마 등 모두 9 개국이 범(汎)중미 자유무역 지역의 창설에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체간 통합의 추진은 중남미 전체의 단일시장 형성을 실질적으로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¹⁾

1) 통합체별 참가국 및 자세한 통합내용은 서동혁, 오형나, 「중남미 경제통합의 영향과 우리의 대

경제통합 실현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통합실패를 거론하면서 경제정책과 환율정책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인플레율이 17%인 나라와 1,200%인 나라간의 경제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망을 밝게 보는 이들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지가 전혀 약화되지 않았으며 통합관련규정이 이미 국내법에 반영되는 등 주변여건변화가 지금까지 남미공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왔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통합은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체 중 특히 1991년 초에 체결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어쩌면 중남미의 경제지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과거와 달리 그만큼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접국과의 교역확대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부터 중남미의 경제통합은 보다 큰 탄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다수의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통합을 이미 궤도에 들어선 기차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는 금년들어 이미 주요국 모두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거나 민영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석유화학·항공에서부터 조그만 설탕가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영화는 현재 어느 경제조치보다 가시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효과에서도 외국인투자의 상당

용전략」, (산업연구원, 1993. 5.) 참조.

부분이 민영화 과정에서 실행된 것이라는 점과 민영화의 결실이 국가재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구조조정의 의미와는 별개로 경제안정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긍정평가되면서 많은 이해 당사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유화는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계속 흑자를 견지해오던 중남미의 무역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키는 일부 역효과를 야기하였다. 일례로 멕시코의 무역수지 적자는 91년 69억 달러에서 작년에 무려 158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중간재·자본재의 원활한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국내 취약산업의 생산성과 자생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제고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수입자유화는 중남미경제의 허약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문제점 및 전망

그러나 중남미는 이러한 경제성장기조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취약한 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GDP에 대한 국내총투자 비율이 아직도 과거 70년대 성장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기간내에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81년 21.1%이던 동비율은 91년에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우 같은 기간중 30.8%에서 32.2%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 대외자본에의 지나친 의존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작년말 자본유입의 증가추세가 일시 둔화되면서 벌써 일부에서는 금년의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할 정도이다.셋째, 외채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력에 비해 과중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지불불능·중지와 같은 외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증가가 대내외적인 이유로 한계에 직면할 것인 반면 경제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의 과대평가는 많은 나라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출업자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표 1> 참조).

중남미는 경제자유화정책을 표방하면서 수입자유화,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의 가시적 조치를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염존하는 지역이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에서 여전히 보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이 제시한 44 개국 중 10 개국이 중남미 국가인 점이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별로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4 개국이 가장 많은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 대해서도 이미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취하거나 그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중남미의 보호정책은 수입자유화 틀속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1>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격차

국가/기간	'92.1-12	'92.6-'93.5
아르헨티나	43.75	-
브라질	1.10	1.10
멕시코	4.25	2.22
칠레	6.05	0.80
콜롬비아	11.95	0.76
베네수엘라	1.12	1.07
파테말라	4.90	1.41
코스타리카	169.00	1.31
우루과이	1.66	2.01

향후 중남미경제의 큰 흐름을 조망해 볼 때, 정책방향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성장을 희생삼아 당분간 긴축전쟁을 지속할 전망이어서 대체로 높은 성장세보다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성장세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이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 사회복지의 확대 등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과 아울러 IDB나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자금공여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의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신장될 것이 분명하다. 멕시코가 NAFTA를 국가적인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은 중남미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거는

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국제금융 시장에서 유력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중남미 주요국의 신용도가 팔목하게 향상되고 있음은 중남미 입장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민간정부들이 과거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받는 높은 지지는 앞으로의 정책 안정성, 정부·기업·국민간의 공감대 형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을 잘 활용할 경우 과거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다시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